

텍사스 정전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INTERRUPTION OF ELECTRIC SERVICE



이호무
연구기획조정실 실장
선임연구위원

필자가 워싱턴DC에 파견 나가 있던 시기에 알고 지냈던 현지 에너지 전문가 한 분이 있다. 식견과 인격 모두 흠잡을 데 없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왜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정부 규제하에 있는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나는 70년대 오일쇼크의 트라우마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정부와 공기업의 절대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주었다는 말과 함께 2000년대 초반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좌초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구조개편 중단 배경으로 당시 엔론 사태의 여파로 시장 자유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급증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자 그분께서 괜히 멋쩍게 웃더니 나도 거기에는 좀 책임이 있다는 생뚱맞은 말을 하셨다. 내가 의아해 하자 사실 그때 자기도 비록 경영진은 아니었지만 엔론 직원이었다고 밝히면서 회사가 불쌍사납게 망한 여파가 멀리 한국에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덧붙이셨다.

한국에서는 에너지가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를 보며 갖게 되는 우려라는 점은 내가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눴던 미국, 유럽 전문가들이 모두 흥미로워 했던 부분이다. 절대 부족한 에너지 부존량과 사실상 섬처럼 고립된 우리의 에너지 네트워크,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산업구조 등 저간의 사정을 내가 구구절절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직적 시장 구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환경적 비효율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의문은 아마도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텍사스에서 벌어진 정전 사태와 시장 혼란 소식을 접하면서 ‘엔론의 추억’ 그리고 워싱턴의 미국 의회도서관 옆 커피숍에서 나눴던 대화와 그 비슷한 여러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는 설정되었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경로와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척점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 일부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우

리로 치면 한 달에 400만 원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거나 400만 가구 이상이 전기, 가스가 끊어진 채로 평년보다 30도 이상 낮은 살인적 추위를 견디고 있다거나 하는 속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각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내 여론을 이끌기 위한 해석들이 백가쟁명으로 등장하는 것은 으레 있는 일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여라도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으나 사막기후에 북극한파가 들이닥친 0.1%의 이례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들이 99.9%의 이례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논의를 크게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나라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각종 에너지 계획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주기로 새로 세워질 때마다 우리 연구원이 일익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된다. 금번 에너지포커스의 <이슈와 시선>에서는 2019년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에 뒤이어 작년에 속속 발표된 후속 계획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전력,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 등 이미 발표된 분야와 천연가스 등 올해 발표될 분야에서 우리 연구원이 맡은 역할을 돌이켜 보면 새삼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에 전해져 온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이라는, 에너지보다 훨씬 크고 세대도 뛰어넘는 국가의 대계(大計)를 세움에 있어 지엽적 해프닝이 자칫 본질을 흐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도 되돌아보게 된다.

